

새롭게 빛나는 전북교육

2018

중등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연수





일.정.표



2018 중등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연수

❖ 일 시 : 2018년 9월 18일(화) 15:00~17:00

❖ 장 소 : 전라북도교육청 2층 강당

시 간	내 용
14:40 ~ 15:00	• 등록
15:00 ~ 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기에 대한 경례 • 인사말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쌍동(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장) • 학생인권 관련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규홍(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 고희석(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구제팀장)
15:30 ~ 1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진용 (소성중 교사)
16:20 ~ 16:30	• 휴식
16:3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치활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이(학생인권교육센터 교사)
17:00 ~	• 전달사항 및 폐회

목 차

Contents

1. 학교생활규정 전수조사	/ 9
2. 학교생활규정 예시	/ 49
3. 중등 학생자치 실제	/ 73
4. 부 록	/ 103



○

학교생활규정 전수조사



2018 중등 학교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보고서



I 목적

- 전라북도 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전수 조사하여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실시
- 전라북도 각급 학교생활규정 중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
- 학교생활규정 컨설팅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II 관련 근거

1. 「교육기본법」

-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장학지도를 하는 경우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6. (생략)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 보호자, 학생 대표로 구성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5.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교육부 학생복지자치과 -2876, 2014.5.15.)

- 임신·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학칙* 개정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문란 시 퇴학 가능, 이성 교제로 인해 학교의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이성 간 신체접촉을 할 경우 징계 가능 등)
- 시·도교육청은 학교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교육청 단위 ‘학교 규칙 컨설팅’을 통한 점검 병행 실시

III 세부추진계획

1. 대상 학교 수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수	209	133	342

2. 전주조사 내용

- 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의 인권’ 준수 여부
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방향, 절차에 대한 지침 준수 여부

3. 전수조사 기간

: 2017. 11. 1. ~ 2017. 12. 8. (목),

4. 결과보고서 검토

~ 2018. 9. 3.

5. 컨설턴트 명단

순	영역	이름	소속	직위
1	중등	정옥진	회현중학교	교사
2	중등	양희전	전주우림중학교	교사
3	중등	이재호	주산중학교	교사
4	중등	박미향	전주온고을중학교	교사
5	중등	정은균	군산영광중학교	교사
6	중등	김선명	군산영광중학교	교사
7	중등	하송아	전주서중학교	교사

8	중등	안명주	남원한빛중학교	교사
9	중등	서진용	소성중학교	교사
10	중등	조석곤	관촌중학교	교사
11	중등	서영호	전북중학교	교사
12	중등	엄기두	군산여자고등학교	교사
13	중등	이현주	군산동원중학교	교사
14	중등	고종호	지평선고등학교	교사
15	중등	이기섭	한국개입과학고등학교	교사
16	중등	서민이	학생인권교육센터	교사

Ⅳ 중등 학교생활규정 체크리스트

영역	살펴 볼 내용
개정일 및 규정 공개	1. 학교생활규정 개정일이 언제인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여부	1.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학생위원 40%이상)
	2. 규정개정 절차가 민주적이다.
체벌과 교육적 조치	1.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2.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이 있다
방과 후 학습 선택권 부여	1. 방과 후 학습,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선택권이 부여되는 규정이 없다.
용의복장	1. 고정식 명찰을 부착하거나 패용할 것을 강요하는 규정이 있다.
	2. 학생의 복장(양말, 스타킹, 신발, 외투 등)및 두발(길이, 모양, 색상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다.
	3. 교복 착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4. 화장, 장신구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다.
	5. 교복의 치마와 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사생활의 자유	1. 휴대폰을 제출(압수)하는 규정이 있다.
	2. 학생의 휴대전화기, 전자기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예: 학교에 가지고 올 수 없다 등 단, 시험기간은 예외임)

	3.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하거나 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4. 이성교제를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
양심·종교의 자유 및 성평등	1. 학생에게 대체과목 없이 특정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는 규정이 있다.
	2. 반성문, 서약 등 학생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규정이 있다.
	3. 생리결 인정 -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처리하는 규정이 없다
자치활동	1. 학생회 임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다.
	2. 학생투표가 아닌 교사 등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추천하는(학생의 과다 추천) 규정이 있다.
	3. 학급 임원 및 학생회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징계를 받을 시에 자격이 박탈된다는 규정이 있다
	4. 선도부 또는 과거의 선도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다
	5. 학생회 규정 및 학생회 선거관리규정이 없다.
표현의 자유 및 노동권	1.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대자보 게시 및 서명이나 설문조사,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허가 등 학생들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2.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교사들의 허가가 필요한 규정이 있다.
징계, 상벌 규정	1. 상벌점제(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징계와 상벌 절차에서의 문제가 있다.
	3. 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는 규정이 없다.
	4. 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는 규정이 없다.
	5. 징계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품행이 단정하고, 선동, 학생다운, 불순, 불건전, 여성다운,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가망이 없다 등)

중등 학교생활규정 체크리스트별 결과 분석



1 학교생활규정 개정일 및 공개

순	살펴 볼 내용
1	학교생활규정 개정일이 언제 인가?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 분석 결과

학교 급	학교 수	2017년	2016년	2015.12이전	미기재(기타)
중학교	209	31(15%)	16(8%)	76(36%)	
고등학교	133	38(27%)	15(11%)	61(46%)	

★ 실태

- 제 · 개정일이 명확하지 않은 학교가 많음.
- 최근 개정 시점에서 상당 기간을 경과한 학교가 대다수임.
- 규정의 형식이 예시로 제시해준 내용을 복사-붙여넣기로 되어 있음.

★ 의견

- 추후 공지를 통해 통일된 방식으로 통일된 위치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제대로 된 학교나 문제가 있는 학교나 마찬가지로.
- 2011년 이후에 개정을 하지 않은 경우 있어 개별적인 안내가 필요함
- 학교생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 게시 방법(학생회, 학부모 연수, 교무회의 의결 등) 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
-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해야 함

★ 관련 근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여부

순	살펴 볼 내용
1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학생위원 40%이상)

★ 분석 결과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구성 학교 수	구성하지 않은 학교 수
중학교	209	98(47%)	111(53%)
고등학교	133	52(39%)	81(61%)

순	살펴 볼 내용
2	규정개정절차가 민주적이다.

★ 분석 결과

학교 급	전체학교 수	민주적 절차	
중학교	209	74(35%)	135(65%)
고등학교	133	61(46%)	72(54%)

★ 실태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학교가 2015년도 조사 시 중학교 62% 고등학교 96%이었으나, 2017년도 조사에서는 중학교 53% 고등학교 61%임
- 여전히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학교가 대다수임
- 개정 관련 규정이 있으나 모호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많음.

★ 의견

- 학생위원 40%의 규정도 대부분이 있으나, 내용 측면에서 모든 내용을 정한후에 교장의 승인을 얻는다든지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학교가 아직도 있음.
-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된 학교가 있으며, 여전히 문구에만 써놓은 형식적인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함.

★ 관련 근거

「초·중등 교육법」 제9조 제4항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7조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 ① 학교는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구 성	역 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하며, 인권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대표로 구성하며 (인권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포함 가능), 학생의 비율은 40% 이상으로 구성한다.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 심의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 규정안 검토, 의견수렴(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 규정안 확정 •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 및 홍보 • 기타 학교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결정 • 학교 구성원의 학칙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 예시

제〇〇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〇〇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이상인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 ⑥ 위원회 구성 완료 후에는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 등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〇〇조 (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제〇〇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〇〇조 (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〇〇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3 체벌 및 훈육

순	살펴 볼 내용
1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 분석결과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131(63%)	78(37%)
고등학교	133	87(65%)	46(35%)

순	살펴 볼 내용
2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이 있다

★ 분석결과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111(53%)	98(47%)
고등학교	133	77(58%)	56(42%)

★ 실태

- 체벌을 금지한다는 조항만 있고, 대안 제시가 없는 경우가 있음
- 체벌 금지 규정은 선언적 의미이고 대체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교사의 권한이 명시되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임

★ 의견

- 명시적 체벌금지 조항이 있는 학교가 생각보다 적음- 특별이나 대안조치 및 훈계훈육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금지 조항이 없는 학교가 많음
- 체벌 금지 규정이나 교사 권한 관련 규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많아 체벌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체벌 대신 긍정적인 훈육에 대한 제시가 필요
- 언어적 폭력이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므로 폭력의 유형임을 안내를 해야 함

★ 관련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3.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27. 시행 2015. 9. 28>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예시

제〇〇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〇〇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학습 과제 부여 및 방과후 교육
 4.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5. 학부모 통보 및 상담
 6.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4 방과 후 학습 선택권 부여

순	살펴 볼 내용
1	방과 후 학습,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선택권이 부여되는 규정이 없다.

★ 분석 결과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59(28%)	150(72%)
고등학교	133	28(21%)	105(79%)

★ 실태

- 대부분 학교에 해당 규정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 특히 도시 지역 대부분의 학교의 규정에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음.
- 중학교의 경우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항의 규정이 있는 학교가 거의 없음.

★ 의견

- 체벌금지 규정과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규정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인식개선이 필요함.
-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과목 선택권에 해당되며, 없으면 규정 제정이 필요함
- 실제로도 방과 후 학습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규정에 없는 학교의 경우 반드시 학생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에 삽입해야 함.
- 대다수 학교들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기존의 야간 자율학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규정에 선택권이 있는 학교도 실제로는 설득을 통한 강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관련 근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예시

제○○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지 아니하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③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조 (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 ② 학교는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쾌적한 환경(냉난방, 미세먼지 관련)에서 학습할 권리가 있다.

5 용의 복잡

순	살펴 볼 내용
1	고정식 명찰을 부착하거나 패용할 것을 강요하는 규정이 있다.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9(4%)	200(96%)
고등학교	133	33(25%)	100(75%)

순	살펴 볼 내용
2	학생의 복장(양말, 스타킹, 신발, 외투 등) 및 두발(길이, 모양, 색상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다.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113(54%)	96(46%)
고등학교	133	95(71%)	38(29%)

순	살펴 볼 내용
3	교복 착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학교 급	전체학교 수	명시한 학교 수	미명시한 학교 수
중학교	209	70(33%)	139(67%)
고등학교	133	43(32%)	90(68%)

순	살펴 볼 내용
4	화장, 장신구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다.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128(61%)	81(39%)
고등학교	133	80(60%)	53(40%)

순	살펴 볼 내용
5	교복의 치마와 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74(35%)	135(65%)
고등학교	133	37(28%)	96(72%)

★ 실태

- 고정식 명찰패용을 강요하는 규정은 적음
- 학생인권조례에 위배되는 용의복장 규정, 특히 두발과 화장, 장신구 관련 규정들이 지나치게 규정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음.
- 거의 모든 학교에서 염색과 색조화장을 금지하고 있음.
- 3분 1정도의 학교가 교복 착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머리길이 화장, 교복의 시기를 제한하는 제한규정이 많음.
- 용의복장 규정에서 두발에 관한 규정은 많이 사라졌거나 완화된 분위기
- 치마길이와 바지 통 등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학교에 제한 규정 있음.
- 용의 복장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학교는 극소수임
- 교복의 치마와 바지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학교가 소수임.
- 용의복장을 규제를 명문화하지 않으면서 별지나 별도의 규정으로 아주 세세하게 규제하는 학교가 상당수 있음.
- 상당수의 학교가 용의복장의 규제를 상벌점제와 연계하여 규제하고 있음
- 머리의 길이나 치마 길이 · 손톱을 깨끗이 해야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다수 있음.
- 명찰 패용 방식 중 규정 내용을 통해 반인권적인 고정형 방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학교가 대다수임.

★ 의견

- 생활규정에서 용의복장을 규제하지 않는 것이 추세라는 것을 대다수 학교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생활규정이 아닌 별지나 별도의 규정 혹은 상·벌점 제도로 규제하는 것을 방지할 규정이 필요함.
- 생활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나, 학교장, 교직원이 여전히 학생들을 통제하고 제한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을 존재함.
- 인권조례의 정신과 취지에 맞게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권고 필요.
- 용의복장 규정을 당장 없애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교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학생들을 기존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과 노력이 필요함.
- 학생인권조례에 위배되는 용의복장 규정, 특히 두발과 화장, 장신구 관련 규정들이 지나치게 규정되어 있어 개정 필요성이 있음.

- 민주적인 의견 수렴절차와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인권보장 절차가 필요함

※ 2015년도 중·고등학교 명찰 패용 실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명찰패용 방법 현황 조사(국회의원 요구자료) 관련 공문
(인성건강과-22750, 2015.08.28.)

학교 급	학교수	조사 참여 학교 수	고정식 명찰		탈 부착식		명찰 없음	
			학교 수	백분율(%)	학교 수	백분율(%)	학교수	백분율(%)
중학교	209	193	63	33	44	23	86	44
고등학교	133	119	34	28	50	43	35	29
총계	342	312	97	31	94	30	121	39

- 고정형 명찰 : 명찰이 교복에 박음질로 부착되어 있는 경우

예외) 명찰이 교복에 박음질 되어 있으나 주머니 안으로 집어 넣어 보이지 않는 경우는
탈부착형으로 간주

★ 관련 근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예시

제〇〇조 (개성 실현의 권리)

-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 ② 학교는 교복 및 복장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〇〇조 (용모)

- ① 학생은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교복에 대한 선택권(착용 여부 및 시기, 방법, 치마바지 등)을 갖는다.
- ③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을 착용하지 않는다.

6 사생활의 자유

순	살펴 볼 내용
1	휴대폰을 제출(압수)하는 규정이 있다.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110(53%)	99(47%)
고등학교	133	53(40%)	80(60%)

순	살펴 볼 내용
2	학생의 휴대전화기, 전자기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예: 학교에 가지고 올 수 없다 등 단, 시험기간은 예외임)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38(18%)	171(82%)
고등학교	133	8(6%)	125(94 %)

★ 실태

- 휴대폰 소지 자체를 규제하는 학교는 없었음.
- 등교 후 휴대전화를 의무 수거하는 학교들이 대다수임.
-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 2일 이상 압수(보관)하는 경우만 위반으로 봄.
- 휴대폰을 제출하는 규정과 제출하지 않을 때에 압수하는 규정은 거의 모든 학교에 있음.
- 휴대폰 제출규정이 많고 보관 시기를 정하고 있는 학교도 많음

★ 의견

-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의견 수렴을 통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생활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있게 규정을 개정해야 함.
-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정한 경우는 딱히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나, 되도록 일괄수거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권고할 필요가 있음.
- 상습 위반자는 학교위원회 회부해서 처리
- 개인의 사적 소유물에 대한 자유 보장을 원칙으로 함
- 학교생활규정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학생의 사생활 및 소유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당일 수업 종료 시 즉시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함

- 교사가 휴대전화 분실에 대한 위험부담을 지는 일괄수거 및 압수의 방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의미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제한과 강제보다는 학생에게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의 건전한 사용예절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학생 스스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이의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함.

★ 관련 근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휴대폰 보관 후 분실 시 학교에서는 우선 분실신고를 한 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하면 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접수받은 후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적정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부)

학교 관리 중 분실된 휴대폰 등 보상 지원계획 안내(인성건강과-35456, 2013.12.17.)

※ 일부 학교에서 학교규칙에서 학생들의 학교 내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한 별칙으로 전자기기를 학교가 상당 기일 동안 일시 수거하는 사례가 있음.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휴대하지 못해 안전과 관련된 긴급 상황 시 구조 요청 등을 할 수 없는 등 안전이 우려됨.

학교규칙 운영 및 제·개정 운영 안내(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2919, 2014.5.19.)

★ 예시

제〇〇조 (전자기기 사용)

-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 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순	살펴 볼 내용
3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하거나 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34(16%)	175(84%)
고등학교	133	8(6%)	125(94%)

★ 실태

- 상당수의 학교에 동의를 구하고 동성 교사가 검사하는 규정이 있음
- 소지품 검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학교가 있으며,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학교는 소수임

★ 의견

-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생활자유 보장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바람직함.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하에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고, 동성의 교사가 실시해야한다는 규정 등이 필요함.

★ 관련 근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 예시

제〇〇조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ライター,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뚜렷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〇〇조 (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③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④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⑤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18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제18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살펴 볼 내용
4	이성교제를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27(13%)	182(87%)
고등학교	133	24(18%)	109(82%)

★ 실태

- 이성교제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않으나, 개방된 장소에서만 만나야 한다는 규정이 상당수 학교에 있음.
-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학교가 여전히 있음
- 신체접촉을 할 경우 징계 가능한 규정이 있는 학교가 있음

★ 의견

- 이성교제를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남녀학생이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음. 이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규정의 단순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적을 유지하고, 미혼모 위탁시설의 위탁교육 안내양성평등, 소수자보호 등의 학생들의 기본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
- 이성교제에 관한 교육이 우선시 되도록 해야 함

※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교육부 학생복지자치과 -2876, 2014.5.15.)

- 임신·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학칙* 개정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문란 시 퇴학 가능, 이성 교제로 인해 학교의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이성 간 신체접촉을 할 경우 징계 가능 등)
- 시·도교육청은 학교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교육청 단위 ‘학교 규칙 컨설팅’을 통한 점검 병행 실시

★ 예시

제○○조 (대인관계에서의 자세)

- ① 학교 구성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학생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③ 학생은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④ 학교 구성원 사이의 따돌림, 폭력 등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갈등이나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 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⑥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7 양심·종교의 자유

순	살펴 볼 내용
1	학생에게 대체과목 없이 특정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는 규정이 있다.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13	0(0%)	213(100%)
고등학교	133	0(0%)	133(100%)

순	살펴 볼 내용
2	반성문, 서약 등 학생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규정이 있다.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13(6%)	196(94%)
고등학교	133	17(13%)	116(87%)

★ 실태

- 특정종교를 강요하거나 특정종교의 수업을 강요하는 규정을 가진 학교는 없었 음.
- 종교 대체 과목 수강금지 항목이 있는 학교가 있음
- 양심에 반하는 반성문 강제 제출 규정을 유지하는 학교가 여전히 존재함.
- 흡연, 징계사면, 해제 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학부모에게까지 사유서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음
- 종교, 사상의 자유를 언급한 좋은 사례도 있음

★ 의견

- '종교과목수강' 강제는 생활규정을 보고 파악할 수가 없음.
- 종교과목이 있으면 대체과목을 마련해야 함
- 진술을 강요하는 규정을 가진 학교는 없으나, 실제 학교의 생활교육 담당 교사나 담임교사가 반성문·진술서·서약서 등을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강요할 수 없음을 생활규정에도 명시하도록 각 학교에 요청할 필요가 있음.
- 강제적 반성문, 서약 진술 강요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

- 교사 개인에 의한 종교 강요는 금지되어야 함
- 종교, 사상의 자유를 모두 명시하여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함

★ 관련 근거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시

제〇〇조 (양심·종교의 자유)

-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 ② 학생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받지 않는다.

순	살펴 볼 내용
3	생리결 인정 -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처리하는 규정이 없다.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72(34%)	137(66%)
고등학교	133	37(28%)	96(72%)

★ 실태

- 생리결석이 생활규정에 없는 학교들이 많음.
- 규정이 있는 학교 비율이 2015년 전수조사 시 중·고 각각 11%, 6%에 비해 많이 향상됨.

★ 의견

-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출결을 다루기 때문에 이 조항이 규정에 없는 학교들이 많이 보임. 그러나 생활규정에도 생리결 인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근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예시

제〇〇조 (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의 생리 공결을 보장하며,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자치활동

순	살펴 볼 내용
1	학생회 임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다.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미공개 학교 수
중학교	209	78(37%)	131(63%)
고등학교	133	67(50%)	66(50%)

순	살펴 볼 내용
2	학생투표가 아닌 교사 등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추천하는(학생의 과다 추천) 규정이 있다.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27(13%)	182(87%)
고등학교	133	43(32%)	90(68%)

순	살펴 볼 내용
3	학급 임원 및 학생회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징계를 받을 시에 자격이 박탈된다는 규정이 있다.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43(21%)	166(79%)
고등학교	133	43(32%)	90(68%)

순	살펴 볼 내용
4	선도부 또는 과거의 선도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다.

학교 급	전체학교 수	조직되어 있는 학교 수	조직되어 있지 않은 학교 수
중학교	209	63(30%)	146(70%)
고등학교	133	86(65%)	47(35%)

순	살펴 볼 내용
5	학생회 규정 및 학생회 선거관리규정이 없다.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152(73%)	57(27%)
고등학교	133	86(65%)	47(35%)

★ 실태

- 학생회임원 선출 규정이나 세칙을 별도로 운영하는 학교가 많음.
- 학생회 규정이나 선거규정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별도의 규정이나 별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학교들도 소수 있었음.
- 학생회 임원의 피선거권을 규제하는 학교가 많음 -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많은 학교들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 징계시 임기 중에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가진 학교도 보임
- 관련성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조

항이 많다.

- 교사가 임원을 임명하는 학교는 없었음
- 선도부라는 명칭을 쓰면서 선도부 활동을 유지하는 학교 외에 ‘바른생활지킴이’ 등의 명칭으로 실질적 선도부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음.
-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많음
-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규정들이나 처리 과정의 민주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학생회 의결 사항에 대해 학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음.
- 교내 회합에 대해 지도교사나 학교장 승인 요구
- 학교장이 부서장, 학생회장단 임명하는 학교가 다수임
- 학생회가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도록 한 학교가 많음
- 학생회에 선도 기능을 가진 부서를 조직하고 있는 학교도 많다.

★ 의견

- 학교생활규정 검토나 전수 조사 시 본 규정 외에 여타 규정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 전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함.
-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대해 강력하게 개정을 요구해야 함.
- 별도 규정이 중요함 (별도 규정을 제시하지 않은 학교가 많다).
- 선도부 규정이 있는 학교의 경우 선도부 관련 공문 발송 요망
- 선거관리위원회 및 대의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많다.
- 동아리를 결성할 때 학교의 지원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인가나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학생들의 결사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조항이 있어 개정이 필요함.
-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이 필요함.
- 별도의 OO규정에 따라, 또는 OO위원회에 따라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많으나, 그런 규정이나 위원회에 대해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 학교가 별로 없음.
- 자치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간섭을 배제하도록 개정해야 함
- 입후보자의 평가 주체는 학생들이므로 학생 스스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함
- 학급 임원과 학생회 임원 선거에 입후보에 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교사의 인식개선을 위해 안내가 필요함.
- 과거 징계 기록으로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함

- 학생회 의결사항은 최대한 존중해 주도록 하고, 필요하면 학교장과 협의할 수 있음
- 학생회 임원이 권력화가 되지 않도록 임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필요함.

★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 ㉡ 학교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 ㉢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들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예시**제〇〇조(자치활동)**

- ①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들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 ③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⑤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구성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규정에 따른다.
- ⑦ 학생회 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은 학생회에서 한다.

9 표현 및 노동권의 자유

순	살펴 볼 내용
1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대자보 게시 및 서명이나 설문조사,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허가 등 학생들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5(4%)	204(96%)
고등학교	133	4(3%)	129(97%)

순	살펴 볼 내용
2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교사들의 허가가 필요한 규정이 있다.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2(1%)	207(99%)
고등학교	133	3(2%)	131(98%)

★ 실태

- 교내 회합, 외부 참가 허가 조항이 있는 학교가 있음
- 모든 집회와 결사는 학교장 허락 필요한 경우가 다수임
- 게시판에 게시할 때 학교장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불법집회, 불온문서 등의 벌점, 징계 규정으로 규제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의견

-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가 거의 없으나 이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권고해야 함.
- 서명,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삽입하여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 개정을 해야 함
-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규정에서 개선된 학교가 없다는 점은 너무 심각한 상황이며,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관련된 규정에서 학교의 노동권보장의무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함.

★ 관련 근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7조 (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예시

제〇〇조 (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 ④ 학생은 모임이나 단체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전라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자료 제작 (인성건강과-18887, 2015.7.14.)

청소년이 알아야할 노동권리' (전북학교 소식 앱)

너 그거 아니?(01 최저임금 ~ 11 알바십계명) 청소년 노동인권 Q&A(01~16)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human.jbe.go.kr>) 인권자료 탑재

10 징계 · 상벌 규정

순	살펴 볼 내용
1	상벌점제(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 급	전체학교 수	시행 학교 수	미시행 학교 수
중학교	209	72(34%)	137(66%)
고등학교	133	58(44%)	75(56%)

순	살펴 볼 내용
2	징계기준에 인권침해적인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불법집회 또는 불법 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한 학생,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등)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109(52%)	100(48%)
고등학교	133	68(51%)	65(49%)

순	살펴 볼 내용
3	징계와 상벌 절차에서의 문제가 있다.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기회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 보장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징계 내용을 공고하는 등의 절차상 문제 여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문제가 있는 학교 수	문제가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42(20%)	167(80%)
고등학교	133	29(22%)	104(78%)

순	살펴 볼 내용
4	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는지의 여부 (예를 들어, 상벌점제를 운영하면서 벌점 100점 초과 시 퇴학처리함,)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24(11%)	185(89%)
고등학교	133	12(9%)	121(91%)

순	살펴 볼 내용
5	징계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품행이 단정하고, 선동, 학생다운, 불순, 불건전, 여성다운,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가망이 없다 등)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111(53%)	98(47%)
고등학교	133	80(60%)	53(40%)

★ 실태

- 상벌점제를 징계나 용의 복장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학교가 여전히 많음.
- 아직도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된 징계규정이 있는 학교가 많음.
- 과거부터 내려온 징계 기준을 수정이나 개정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임.

- 징계와 상벌 절차의 경우 표준안을 잘 따르고 있음.
- 사유의 경중을 따져 징계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규정하고 있음.
- 징계기준에 자의적인 단어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너무 많이 사용되어 학생들의 인권보호에 부정적인 학교가 대부분임.
- 재심청구권을 학교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학교가 다수 있음.
- 그린마일리지를 실시하고 특히 학교자치법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음.
- 징계 기준이 전근대적이고 반인권적인 용어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규정들이 미흡한 학교가 다수임.

★ 의견

- 징계기준은 그 학교의 인권우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인권적으로 시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징계기준(표)가 현실적이지 않아 구성원의 논의를 통해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선도협의회, 선도위원회를 “생활교육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생활규정 전수조사 시 홈페이지에 생활규정과 징계기준을 반드시 올리도록 공지할 필요가 있음.
- 재심청구권, 조력권, 진술권 등 학생들의 적법절차권을 보장하도록 학교에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상·벌점이나 자치법정으로 징계를 결정하는 학교가 있으며 이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 지속적인 안내를 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근거

- 초·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6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

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 인권옹호관 및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예시

제〇〇조 (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면 안 된다.

제〇〇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참여 여부는 학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사회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기간은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교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〇〇조 (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〇〇조 (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〇〇조 (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각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학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조 (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시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④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학생의 학교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상담 및 회복적 교육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는다.

제○○조(장애학생 대상 징계)

① 특수학급·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 또는 일반학교(다른 학교 재학하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적용)에 적용 된다

②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③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 할 수 있다.

제○○조 (징계의 기준)

학교생활규정 재·개정 방향이 제시한 관련 근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각 학교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19조 2항의 절차를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13 종합의견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이므로, 반드시 학생인권조례에 준하여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함
- 전체적으로 학교생활규정 체크리스트 합산점이 낮으며, 비교적 양호한 규정을 갖고 있는 학교라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참고자료로 제시한 규정 예시안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놓은 경우가 있음.
- 많은 학교가 2015.12월 이전에 생활규정을 개정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이것은 생활규정 전수조사 이후 각 학교 생활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이 제

대로 되지 않았고, 학교들 역시 개정의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학교생활규정 전수조사 이후 각 학교생활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봄.

- 학교생활규정은 인성인권업무 담당 교사만의 몫이 아니므로 전체 구성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하며, 금지(부정적)의 규정보다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이 되어야 함.
- ‘생리결을 공결처리해야한다’와 같이 학생들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내용의 조항으로 최소한의 보장이 아니라 최대한의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방과후학습 선택권과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규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으로 드러난 항목 및 방향에 대한 학교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해당부서를 통해 지속적인 확인과 안내가 필요함.
- 학생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했다고 해도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개정해야 하며, 개정전 학생들에게 인권교육 및 학생자치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개정의 방향이 학생인권조례에 준해야 함.
- 인권은 규정의 문제를 넘어 기본권이므로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정책 및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실천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



학교생활규정 예시



○○학교 학교생활규정(예시)

제정 2000. 00. 00

제○차 개정 2016. 00. 00

제○차 개정(전면 개정) 2018. 00. 0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목적) 이 규정은 ‘○○ 학교 **학교생활규정**’ 이라 하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근거 및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의거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3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규정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소속 **학생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 및 교직원, 학부모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2장 권리

제4조 (학생 인권 보장)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차별의 정의와 종류에 따른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특히,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 안 된다.
- ② 학교는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쾌적한 환경(냉난방, 미세먼지 관련)에서 학습할 권리가 있다.

제7조 (개성 실현의 권리)

-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 ② 학교는 교복 및 복장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8조 (정보에 관한 권리)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①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에 대한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 ②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학생회를 통한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0조(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생 징계 때에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교육적 배려가 수반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11조 (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의 생리 공결을 보장하며,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 생활

제12조 (대인 관계에서의 자세)

- ① 학교 구성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학생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③ 학생은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④ 학교 구성원 사이의 따돌림, 폭력 등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갈등이나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 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⑥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제13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 등 학교 시설을 사용할 때 규칙과 절차를 잘 지킨다.
- ④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⑤ 수도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 ⑥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등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한다.
- ⑦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식생활관, 화장실 등)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14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5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조짐을 알게 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학교에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6조(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지킨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으며,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④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제17조(휴식시간)

- ① 학교장, 교직원 등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③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교실과 복도 등에서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8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뚜렷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9조(용모)

- ① 학생은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교복에 대한 선택권(착용 여부 및 시기, 방법, 치마바지 등)을 갖는다.
- ③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품을 착용하지 않는다.

제20조(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 ④ 학생은 모임이나 단체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21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2조(전자기기 사용)

-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 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23조(자치활동)

- ①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들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 ③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⑤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구성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해서

는 안 된다.

- 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규정에 따른다.
- ⑦ 학생회 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은 학생회에서 한다.

제24조(동아리 활동)

- ①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③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학생 생활 교육

제25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폭력

제26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2. 교육환경 조성
- 3. 행동 개선 요구
-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5.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7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먼저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학습 과제 부여 및 방과 후 교육
 4.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5. 학부모 통보 및 상담
 6. 기타 학교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을 수정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③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④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⑤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18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제18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29조(전자기기 사용)

-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을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② 제22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30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교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 ③ 학교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 ④ 학교위원회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⑤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⑥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면 안 된다.

제32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참여 여부는 학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사회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기간은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교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3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 인권부, 진로상담부, 해당 학년 교사, 교감, 교장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무단결석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학교에서 상담 및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호자의 요청시 보호 가능 확인 후 가정학습(과제 부여 등 학습 조치)을 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34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학교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학교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통화 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5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학교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학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사후 조치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④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학생의 학교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상담 및 회복적 교육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는다.

제37조(장애학생 대상 징계)

- ① 특수학급·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 또는 일반학교(다른 학교 재학하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적용)에 적용 된다
- ②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 ③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 할 수 있다.

제38조(장애학생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이유로 불쾌감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폭력 및 차별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39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00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

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⑥ 위원회 구성 완료 후에는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 등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 안전과 관련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0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학생회 대표(대의원회 의결서 첨부)
3. 재직 교원의 과반수
4.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제41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2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을 확정하

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3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일(2018.00.00)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00학교 학생회 규정(예시)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학생회는 학급 학생회, 전체 학생회로 구분하여, 각각 00학교 학급 학생회(이하 학급 학생회), 00학교 학생회 또는 총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학생회는 회원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고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또는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기구 및 조직)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 및 조직을 둔다.

1. 학생총회
2. 대의원회
3. 학년학생회
4. 학급학생회
5. 운영위원회
6. 동아리연합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기타

제5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장 권한

제6조(권한)

- ①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 등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자유로운 학생자치활동을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 ③ 학교 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 ④학교의 운영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역할)

- ①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심의 의결한 사항을 추진한다.
- ② 학생회 활동 예산편성 집행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학생의 의견 요구를 수렴하여 대변한다.
- ④ 학생의 인권과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⑤ 축제 및 학교 행사를 능동적으로 기획 및 추진한다.
- ⑥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제8조(기능)

1. 학교 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복지, 기타)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3. 학교에 대한 건의를 위한 의견 수렴 및 전달
4.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학생의 인권·복지·생활 관련 안전에 대한 협의 및 의견 개진
5. 학생회 운영
6. 학생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기타 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3장 기구 및 조직

제9조(학생총회)

- ① 학생총회는 학생회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 ② 전교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연다.

제10조(대의원회)

- ① 학생회의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학생회장단
 2. 각 학급 학생회장 1명
- ③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 ④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의 사업계획·사업보고 심의 및 승인
 2. 예·결산 심의 및 승인
 3. 교육정책 제안 사항 심의
 4.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5. 집행위원회의 각 부서 부장 및 차장 임명 동의안 인준
 6. 학생회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 안 심의·의결
 7. 기타
- ⑤ 대의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 정기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대의원 1/5 이상 또는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때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에서 일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학생회 업무담당교사는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에 전달한다.
 5.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 ① 학생회 운영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차장으로 한다.
- ③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기획부 : 축제 등 학생자치활동 계획 및 기타 사항
 2. 문화부 : 학술,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심신단련을 위한 활동
 3. 생활자치부 : 학생 간 갈등 중재, 기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길라잡이 담당.
 4.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5. 학습부 : 학력 향상에 관한 사항, 자율학습 등의 사항
 6. 홍보부 : 학교 및 학생자치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7. 봉사부 : 교내 외 봉사활동 안내 및 추진
 8. 인권복지부 : 학생 인권 및 복지 관련 사항
- ④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안) 작성
 3. 예산편성 요구 및 결산 보고
 4.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5. 기타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학생회 업무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학교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제12조(학년학생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년학생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학급학생회)

① 기능

1. 학교 생활(교과 활동, 학급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인권 및 복지, 기타 학생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건의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3. 학급 규칙 등의 제정

② 학급학생회의 부서는 **제11조와** 같이 하거나 학급 자체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학급학생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학급회장, 학급 부회장 각 1명
2. 각 부장 1명
3. 제1호의 학급회장은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된다.
4.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차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④ 학급회장, 부회장 선거 및 당선자 결정

1. 학급학생회 선거는 학생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2. 학급회장, 학급 부회장은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3. 학급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는 매년 학기 초(3월, 9월)에 실시한다. 단, 회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2학기 선거는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학급 학생회의 운영

1. 학급 학생회 회의는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학급 학생회 회원 1/5이상 또는 학급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2. 학급회의의 의결은 회원 2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 학급 학생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3.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기타 학급학생회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학생회 회장, 부회장(이하 학생회장단) 선거 등의 공정한 관리 및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은 각 학급에서 1명 내외의 추천 또는 지원을 받아 7~9명으로 선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 ③ 이 규정의 선거관련 위임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선거

제15조(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14일 전까지 선거 일시 등 선거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16조(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때 선거인명부는 각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학생회장단 후보 등록)

- ① 회장단에 입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선거 공고일 현재 학생회 회장 후보는 2학년(차기 학년도 3학년), 부회장 후보 1인은 2학년(차기 학년도 3학년), 부회장 후보 나머지 1인은 1학년(차기 학년도 2학년)으로 한다.
 2. 학생회장단 후보는 소정의 양식에 1~2%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학생회장단 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은 불가하다.
 3. 학생회장단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후보자 추천서, 후보자 등록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받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서류를 심사하여 주요 사실에 허위가 있거나 후보로서 부적격한 경우에는 무효처리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후보 기호를 결정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 및 후보 기호 결정 후, 그 결과를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18조(학생회장단 선거 및 당선자 결정)

- ① 투표는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② 선거인의 1/2 이상이 투표하여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준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또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③ 학생회장단 선거는 해마다 실시하며, 임기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④ 대의원회의의 결정으로 선거 시기 및 학생회장단 임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학생회 각 부서의 부·차장 인준 및 임명)

- ① 학생회장은 각 부서의 부·차장 임명동의안을 제10조 대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후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동의안은 임기 개시 이후 첫 번째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 ② 각 부서의 부장은 3학년으로, 차장은 2학년으로 한다.

제5장 예산 및 결산

제20조(예산편성 요구)

- ① 학생회의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한 예산과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편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고,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1조 (결산) 학생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장 규정의 제·개정

제22조(규정의 제·개정) 학생회 규정의 제·개정은 대의원 1/3 이상의 찬성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의 자율성 보장) 학생자치기구의 심의·의결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제24조(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생활규정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등 학교 규정을 수시로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교생활규정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의 제정 및 시행일은 「00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의 공포일 (2018. 00. 00)로 한다.

○○학교 학생회 선거관리규정(예시)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회장단 선거를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체득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운동 기간) 개별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을 마친 시점부터 선거 전날까지로 한다.

제3조(선거 벽보) 선거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매수와 규격으로 기호, 성명, 약력, 선전 구호, 공약을 명시하여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제4조(소견 발표회 및 토론회) 강당에서, 또는 방송으로 합동발표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되, 횟수와 후보자별 발표 시간, 찬조연설과 같은 세부 진행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결정 사항을 각 후보들에게 통지한다.

제5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각 학급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제6조(선거운동원 등록) 선거운동원을 12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원 및 투개표 참관인 2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제7조(금지) 학용품, 먹을거리 등 일체의 금품 및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유·무형의 강요, 협박, 압력 등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공약) 후보들은 구체성 있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

제9조(투표소 설치) 되도록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정식 투표소를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이 주권 행사의 소중함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투표용지) 투표용지에는 후보의 기호, 성명, 학년, 반을 기록하고 학교 직인과 선거 관리 위원장의 도장이 들어가야 한다.

제11조(투표 방법 및 시간) 투표 방법 및 시간은 학교와 협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의
에서 의결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12조(개표 종사원 위촉) 선거관리위원장은 신속한 개표사무를 위해 각 후보 선거 운
동원이 아닌 학생 가운데서 개표 종사원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개표소 설치) 개표소에는 개표 참관인석, 투표함의 접수·점검·개함·계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제14조(개표 선언)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의 봉합, 봉인을 검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개표를 선언하고 개함한다.

제15조(개표 참관) 각 후보와 개표 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제16조(무효 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지정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3. 두 곳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규정된 기표를 하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기표한 것.
6. 지정된 투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제17조(선거록, 개표록, 집계록 작성보고)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개표록, 집계록을 작성하고, 개표 결과를 즉시 공포하
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록, 개표록, 집계록을 담당교사에게 전달하고 개표 결과를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온라인 선거)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학교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투
표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7조의 투표소(오프라인) 투표 관련 조항은
생략한다.

제19조(당선무효) 선거기간 중 제7조의 행위를 한 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
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20조(당선인 통지와 공고) 당선이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당선자에게 당선 통지를 하고 선거결과를 공고한다.

제21조(선거경비) 선거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회 예산에서 지출한다.



중등 학생자치 실제



학생자치 현황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한다.

고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안 학생의 의견 수렴 미흡 • 교사와 학생간의 학생자치에 대한 인식 차 • 지역별 학생회와 학교 간의 연계성 부족 • 학생자치기구가 교사 업무의 보조 역할 • 입시와 학업 부담으로 인한 교사와 학생의 학생자치 무관심 • 학생자치활동 예산 편성(1% 이상) 학교 수가 적음(43%)
2018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규정 전수 조사를 통한 인권 존중의 규정 개정 안내 • 학교 현장에 학생자치의 개념과 운영 방법 연수 • 학생과 교직원 대상 지속적인 학생자치 연수 • 선도부 폐지 이후 실태 확인 • 학생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방안 • 학생참여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활동 활성화

학교 급	조사 학교수	편성 시간	학생회실	예산편성 운영권부여	학생자치예산 1%이상
초등학교	421	13.4	69(16%)	174(41%)	133(32%)
중학교	207	12.1	120(58%)	129(62%)	112(54%)
고등학교	129	19.7	97(75%)	93(72%)	81(63%)
특수학교	10	10.8	0	4(40%)	4(40%)
총계	767	14	286(37%)	400(52%)	330(43%)

1. 학생회실 설치 지원

- 2017년 49개교 (초 24개교, 중 11개교, 고 14개교) 지원
초등 6,000천원 중등 6,240천원 지원
- 2018 초중등 학생회실 설치 학교 워크숍 (5. 17., 5. 24.)
2018년 48개교 (초 22개교, 중 16개교, 고 10개교) 교당 6,250천원 지원
 - 대상 : 교감, 담당교사, 학생회장 참석
 - 내용 : 학생회실 설치 및 학생자치 사례 행정사항 안내,

선정 시 현재 학생회장 당선증 교부 확인

- 초 46개교 (11%), 중 117개교(56%), 고 92개교 (70%) 지원

2. 학생자치활동 지원 연수

- 대상 : 단위 학교 학생회 회장 등 임원진 (학교 당 1인 이상)
- 지역교육지원청 : 초, 중 학생회 회장단(4월),
도교육청 : 고등학교 학생회 회장단(11월)
- 과정 예시
 - 1박2일, 1일 3~6시간 과정(연 2주)등 지역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 인근 지역교육지원청과 연계 운영
 - 내용 : 인권 및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 사례 및 활성화 방안 토론 등
 - 외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지양

3. 단위 학교 학생자치 연수 지원(특교)

- 대상 : 54개교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 13개교)
- 지원액 : 초등학교 1,660천원, 중학교 1,670천원
고등학교 1,670천원
- 초등(10명) 중등(13명) 학생자치 강사단 운영, 학생, 교사 학생자치 연수 지원

4. 지역교육지원청 학생자치 지원

- 지역교육지원청 단위 학생자치 활동 지원(4개 지역교육지원청 지원)

순	지역 교육지원청	프로그램명	재배정액 (천원)
1	군산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꿈	5,255
2	고창	학생 중심 자율 동아리 꿈트리 참여학생의 자치 활동 역량 강화 캠프	5,245
3	정읍	2018. 2학기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 연수	5,255
4	익산	청소년문화축제 학생준비위원회 지원 계획	5,245

5.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 희망학교 컨설팅(2018. 6. ~ 12. 컨설턴트 2명~3명 지원)
-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전수조사(도내 초중고) 발표

영역	체크리스트
규정	개정일, 규정개정심위원회 (학생위원 40% 준수여부 포함)
체벌	체벌금지 규정,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사의 권한
방과후	정규교과이외의 활동 학생선택권 보장
개성실현	복장,두발,양말,스타킹,신발,외투,액세서리,화장 등에 대한 제한 규정
사생활	휴대폰 수거, 소지품 검사, 반성문 강요
평등 표현	생리공결, 표현의 자유 침해(게시판, 누리집 허가제 등)
학생자치	출마 제한(과다 추천), 학생회 결정 학교장 승인, 학생회 규정 존재
징계	상벌점제, 자의적인 용어(학생다운 등),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구성

6. 학생자치 및 학교생활규정 지원 연수

- 대상 : 도내 초중등 교감,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 시기 및 장소 : 9월 말
- 내용 : 학생인권 침해 사례 안내, 초중등 학생자치설명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7.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 위원 수 : 총 50명 (초 8명, 중 14명, 고 28명 남 26명, 여 24명)
 - 지역교육지원청 별 공개모집 42명, 교육감 추천(소수자 의견 반영) 8명
- 역할 :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참여를 위한 필요한 사항 협의 및 의견 제출

8. 학생인권 토론회(학생참여위원회 주최)

- 주제 : 학생이 생각하는 인권교육(4월), 11월

9. 학생자치 자료 개발 보급(특교)

- 교재 : 초등 학생자치 설명서 보완 제작 보급(사례 보완)
- 자료 : 초 중등 학생자치 과정 애니메이션(동영상), 학생자치 삽화 등

10. 인권관련 동아리 운영(인권, 노동, 평화, 학생자치)

- 사제동행 인권동아리 : 100팀 운영(팀당 2,000천원)
- 인권교육 연구동아리 : 10팀 운영(팀당 2,500천원)
 - 워크숍 시 평가회 실시, 지도안 5개 작성(연구동아리)

11. 전라북도교육청 주최 시도교육청 학생인권관련 담당자 협의회(4. 19. ~ 20.)

- 교육부 관계자, 시도교육청 학생자치 담당 장학관 장학사 협의회
-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자치 학교생활규정 협의

※ 초 중학교 학생자치 시간 10시간, 고등학교 학생자치 17시간

학생회 예산 편성 운영권 부여, 단위학교 학생자치 예산 학교기본운영비 1% 이상 필수 (개산급)

학생회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발언권 보장

중등 학생자치의 실제

I.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자치 정책

1. 학생자치 관련 조례 조항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들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안」 제2장 자치기구

제5조(학생회) ① 학생회에는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생자치활동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학생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5. 학생회칙의 제·개정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③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④ 학생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전라북도 학생자치 실태

전라북도내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실태 조사(2017.12.)

학교 급	조사 학교수	편성 시간	학생회실	예산편성 운영권부여	학생자치예산 1%이상
초등학교	421	13.4	69(16%)	174(41%)	133(32%)
중학교	207	12.1	120(58%)	129(62%)	112(54%)
고등학교	129	19.7	97(75%)	93(72%)	81(63%)
특수학교	10	10.8	0	4(40%)	4(40%)
총계	767	14	286(37%)	400(52%)	330(43%)

3.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정책

- 학생자치 시간 확보 - 초중 10시간, 고 17시간 이상 편성
- 단위 학교 학생자치 지원 연수(54개교 교당 167만원 특교)
- 단위학교 학생자치 예산 편성(학교기본운영비 1% 이상) 및 학생회에 예산편성 운영권 보장
- 초중고 학생회실 설치 지원(48개교 교당 625만원)
- 초중고 회장단 학생자치활동 지원 연수(초중-지역교육지원청, 고-도교육청)
- 지역교육지원청 학생자치 사업 지원
-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및 전수조사(2017. 12월 실시) 결과 안내
-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 초등 학생자치 설명서(교재) 및 영상 제작 및 보급

II. 학생자치

1. 정의

‘자치’는 스스로 문제를 고민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학생자치활동’이란,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생활의 많은 부분을 설계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여 스스로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 내에서 공적인 무리를 이루면 ‘학생회’가 되며, 이 학생회는 전체 학생을 대표하여 학교의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축제 기획과 운영,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과 같이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무리를 이루어 펼치는 자치활동으로는 ‘동아리’를 들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십대 시절 다양한 경험을 누리며 성장할 권리가 있고, 학교는 그런 경험의 기회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원해야합니다. 학생들이 만들고 싶고 배우고 싶은 활동은 자발적인 동아리 조직을 통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해야합니다.

학생회는 학교의 규모나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고, 학생들의 요구와 바람에 따라 다양한 연간 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 학교만의 학생회 조직을 마련하여 다른 학교와는 차별화된 학생회를 운영해 나갈 수도 있겠지요. 다만 학생회를 조직하고 운영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의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회 임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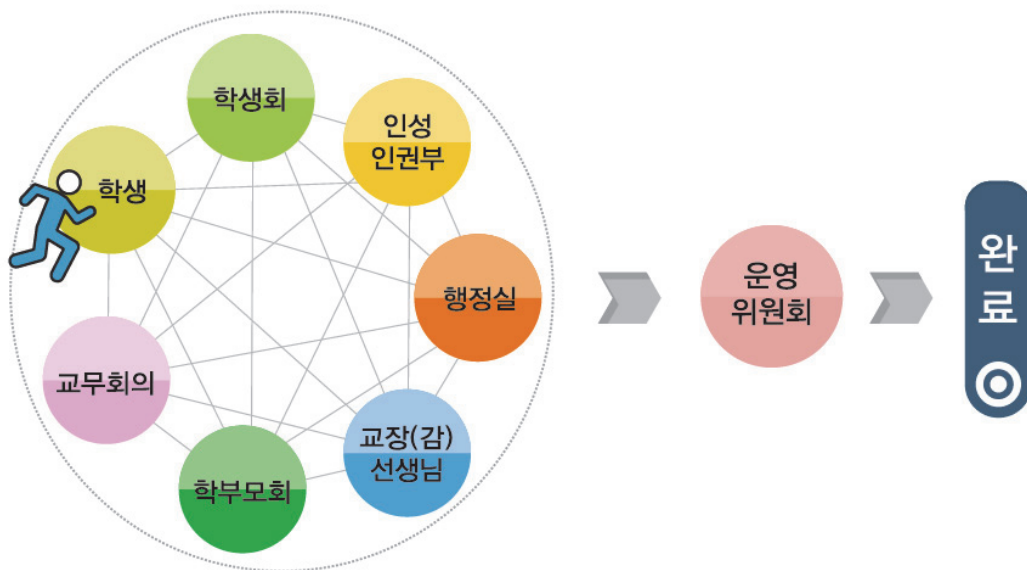
2. 학교의 구성원과 의사 결정

학생자치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구성원과 의사결정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아야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구성원에게 전달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 학교 구성원들의 역할

구성원	역 할
학생회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생 의견 수렴, 의견 제시, 학생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교무회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고, 의견을 제시
교사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자치활동을 지원
교감	교장 보좌, 교장 부재 시 직무대행, 교무 관리, 교육과정 설계 및 추진
교장	학교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인성인권부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을 상담하고 학생회 활동을 지원
행정실(장)	학교 예산 집행, 학교 시설 관리, 학교 행정 업무 지원
학부모회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학교 운영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학칙의 제개정, 학교 예산결산, 방과후활동 및 수련 활동, 급식 등 심의·자문,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나.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



3. 학생회

- 학생 자치의 중심
- 전체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
- 학교의 문제를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

가. 구성

종류	역할
학생총회 (다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 : 학생회장 ◦ 구성 : 재학생 전체 ◦ 역할 :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학교생활규정 개정 등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 토의, 의결
학생운영위원회 (이하 학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 : 학생회장 ◦ 구성 : 학생회장과 부회장, 학생회 각부 부장 및 차장 ◦ 역할 : 학생회 운영 계획안 수립,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학생자치활동 예산안 편성 및 집행
대의원회 (학급대표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 : 학생회장 ◦ 구성 : 학생운영위원회 임원, 각 학급 대표, 동아리 연합회 대표 ◦ 역할 :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안전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총회 소집 · 학생회 운영 계획· 학생자치활동 예산운영(안) · 대의원 및 학급회의 건의사항,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학생 의견수렴 및 심의 등 </div>
학급자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 : 학급반장 ◦ 구성 : 각 학급 임원 포함 반 학생 전체 ◦ 역할 : 학급회 운영 계획, 건의사항 등을 심의·의결
기타 (동아리 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 : 동아리연합회 회장 ◦ 구성 : 각 동아리 회장 ◦ 역할 : 동아리 건의사항 수렴, 동아리 관련 축제 등의 기획, 추진

나. 학생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

1) 사람

임원 선출/연수, 학생회 조직 구성, 학교 구성원들과 유기적 관계 맺기

2) 공간 : 학생회실, 공식적 회의의 공간, 학생 프로그램 준비 공간, 임원 간의 친밀감 유지 공간



3) 예산

선거 시 공약 실현 비용, 여론 수렴의 결과 집행 비용, 각종 회의/모임 지원 비용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학생회 예산은 학교기본운영비 1%이상 확보)

다. 학생회의 권한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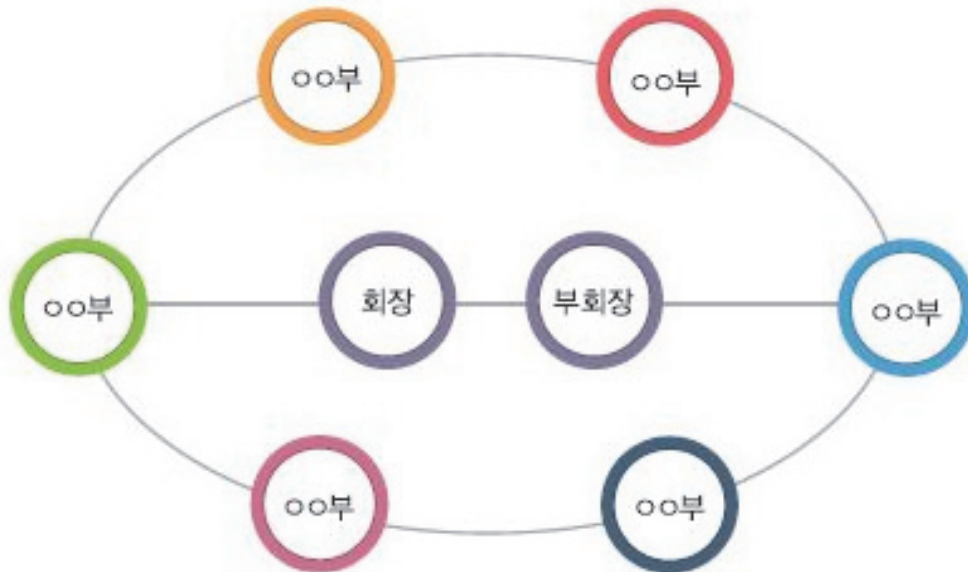
권한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 등을 제공받을 권리 - 자유로운 학생자치활동을 운영할 권리 -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과 심의 의결한 사항 추진 - 학생회 활동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의 업무 수행 - 학생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대변 - 축제 및 각종 학교행사를 능동적으로 기획 및 추진 -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 기획 및 추진



라. 학생회 조직과 역할

학생회 조직은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운영 방향에 따라 다양한 부서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회장 : 학생자치활동 총괄, 학생회 회의 및 대의원회의 주관
- 부회장 : 회장을 도와 학생자치활동 운영, 학생회 회의 및 대의원회의 운영
- 서기 : 회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 및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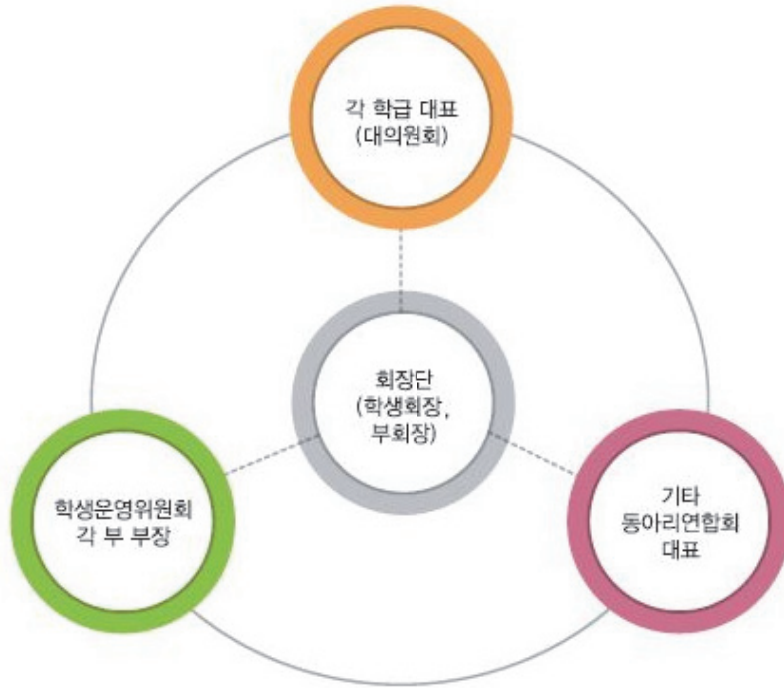


[학생회 부서 예시]

- 학생인권부 :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안내 및 의견 수렴
- 학생복지부 : 학생복지 향상을 위한 의견 수렴
- 총무부 : 학생회실 물품 관리, 회계처리
- 행사기획부 : 학생자치활동 관련 각종 행사 기획 및 추진
- 동아리 활동부 : 학내 동아리 연계 활동
- 체육부 : 학교 체육대회 주관 및 체육활동
- 독서부 : 도서관 활용 및 교내 독서 관련 행사 주관
- 봉사부 : 학생 봉사활동 주관 및 교내 환경 관리
- 홍보부 : 학생회 활동 홍보 및 안내

마. 대의원회 조직과 운영

대의원회는 학생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학급학생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과 요구사항을 모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1) 운영 방법

- 정기회 : 월 1회
- 비정기회 : 긴급한 주요 사안 발생시 임시회의 개최
- 학생회장단은 학교장 및 교감, 행정실장, 인성인권부장(사안에 따라 해당 부장 교사)과 간담회 등을 통해 대의원회 회의 결과의 실행을 위해 노력
- 학급의 대표는 대의원회 회의의 결정 사항을 학급 학생들에게 전달
- 의안(회의 안건) 관련부서는 의안 설명을 준비
- 회의 소집 공고를 내고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대의원들에게 의안내용을 전달

Tip 하나. 다수결이 만능 해결사일까요?

학생자치조직의 운영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개인의 다양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과 절차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개인들 간의 가치가 부딪칠 때는 이를 합리적으로 풀어내야 하며, 소수라 하더라도 쉽게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1. 다수결은 민주주의 만능 해결사?

가치의 충돌이 생겼을 때, 우리는 흔히 다수결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며 그것이 곧 민주주의의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의사를 결정하고자 할 때 토론을 하고 수정을 거치며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는 등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난 뒤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다수결인 것뿐입니다.

2. 꾸준한 만남과 대화 그리고 토론이 정답

민주주의란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이자 타인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가치의 충돌은 만남과 대화의 부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만나기도 귀찮고 서로 다른 의견으로 말싸움을 하는 듯하여 감정싸움이 될 것도 같고 하니 간편하게 “우리 그냥 다수결로 하자.” 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든 결정을 이렇게 간편함을 내세워 다수결로 해치워 버리게 되면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알게 될 기회가 사라져 버리고 결국에는 ‘너와 나는 다른 생각. 다른 사람. 우리는 너무 달라. 어차피 내 생각은 반영되지도 않을텐데’ 하며 서로의 거리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번거롭더라도 자꾸 자꾸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토론 하다보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 선거

학생은 선거를 통해 학생의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학생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고, 각 부장은 학생회에서 임명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급에서 1명 내외의 추천 또는 지원을 받아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며, 선거의 모든 과정은 별도로 마련된 학생회 선거 규정 따릅니다. 선거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세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선거 과정	내 용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투표방법 결정 (전자투표/종이투표 등)
선거일정 공고 및 선거인명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 명단, 입후보 자격요건, 등록시 제출서류 등 공고 ■ 선거일정공고 :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 SMS 문자 발송 등
후보자 등록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신청서 접수 ■ 입후보자의 자격 및 등록 심사 후 후보자 공고
후보자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관위와 후보자 회의 ■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세부 사항 결정 ■ 후보자 기호 결정 ■ 선거운동 안내
선거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벽보 게시, 합동소견발표회 개최 등 ■ 공약자료집 발간 ■ 합동소견발표회 ■ 후보자 토론회
투·개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용지 제작 ■ 선거인명부 확정 ■ 투표소 설치-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 의뢰 ■ 후보자별 투·개표 참관인 접수 및 개표소 설치
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된 선거일에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 실시
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개시 선언에 의해 개표 시작 ■ 개표 후 개표 결과 이상 유무 확인 ■ 후보자 참관인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최종 확인 ■ 개표완료 후 후보자별 투표 결과를 정리하여 개표 결과 공표
당선인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 규정에 따라 당선인 결정 ■ 당선인 결과 발표
이의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당선증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 교부

Tip 둘. 좋은 공약 만들기

1. 공약 만들기

좋은 공약이란 학교생활을 개선하고, 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자신의 힘으로 친구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공약 만드는 절차〉

1. 학교 개선사항 찾기	학교의 미래상과 학생들의 요구(여론 조사 등)고려
2. 해야 할 일 정하기	학교의 문제와 해야 할 일을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만들기
3. 해결 방법 찾기	학교 여건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 설정
4. 최종 공약 선정	학생들의 요구와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 공약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

2. 공약 사례

- * 각 교실에 별레가 들어오지 않게 방충망 설치
- * 화장실 순간온수기 비치
- * 기부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마련
- * 졸업 여행 행선지를 학생 투표로 결정되도록 추진
- * 각 학급 휴지의 보급량을 늘리겠음
- * 양심우산, 우산꽂이 설치
- * 책상 가리개 설치
- *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만들기
- * 선후배간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기
- * 화장실을 청소전문가에게 맡기기
- * 한 달에 한 번 선생님들과 대화의 시간 갖기
- * 정기적으로 교장선생님과 간담회 개최하여 학생들의 요구 사항 관철

3. 학생회 선거의 마무리는 당선증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아야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당선인 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습니다. 회장단 외의 학생회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학생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습니다.

사. 학생회 활동 사례

1) 월 단위 학생회 활동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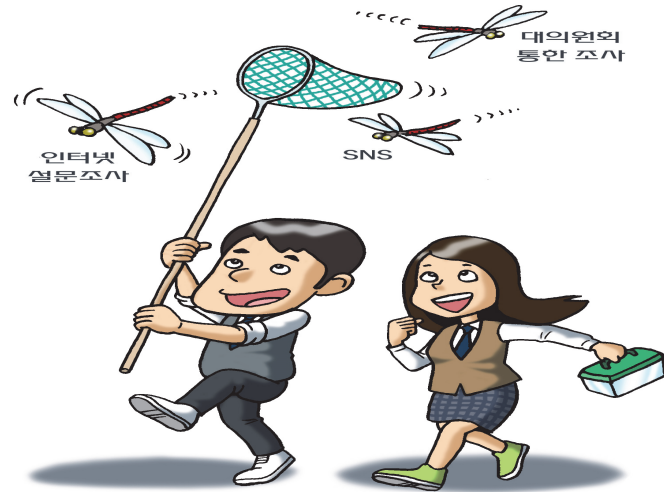
시기	세부 내용
연중	학교생활규정 관련 제안 학급 및 학교에 각종 건의사항 제안
3월	입학식, 학급 임원 선출, 학생총회 및 대의원회 개최(연간 계획 공유) 동아리 조직, 새로 오신 선생님과 사제동행 학교문화 바꾸기 캠페인 계획 세우고 실천하기
4월	학생회 임원 연수, 학생인권의 날, 꽃놀이 각종 캠페인 활동(인권과 평화, 금연, 기부 등)
5월	학교 행사 참여(체육대회, 합창제 등)
6월	또래학습 멘토링 활동
7월	학생회 주관 행사 추진(특강, 공연 등), 학생총회 및 대의원회 개최(평가회의)
8월	학생자치활동 연수(교육청 연수, 또는 자체 연수 등), 야영
9월	각종 캠페인 활동(등굣길 친구맞이 행사, 인권 캠페인 등) 송편 만들기
10월	학교 행사 참여(축제, 학생참여부스 마련, 전시회 등) 축제 우리말 맞추기 대회, 단풍 구경, 가을 풍경화 그리기
11월	학생회 선거(학생회장, 부회장), 학생의 날 행사 주관
12월	신구 학생회장단 인계인수, 학생총회 및 대의원회 개최(평가 및 내년 예산 편성)
1~2월	인수위원회 활동(한 해 사업 연간계획 수립/검토) 졸업식 기획과 진행

2) 학생 의견수렴

■ 대의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학급회 → 대의원회 → 학생회장단과 학교장 면담 및 간담회 → 결과 공지

■ 인터넷을 활용한 설문조사 - 네이버 오피스폼, 구글 설문지 활용



네이버폼 : 서술형 질문

%%중 여름 생활복 디자인 선택

%%중 여름 생활복 디자인 선택에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응답기간 : 2016.11.02(수) ~ 2016.11.16(수)

☐ 중 여름 생활복 디자인 선택

☐ 중 여름 생활복 디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백돌색 카라 티셔츠

☐ 하얀색 카라 티셔츠

선택 2
☐ 선택 1
☐ 선택 2
☐ 선택 3

네이버 폼 : 선택형 설문

질문 응답

학생회장 선거일

학생회장 선거를 언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선택해주세요.

학생회장 선거일

☒ 체크박스

☐ 3월 말

☐ 7월 여름방학 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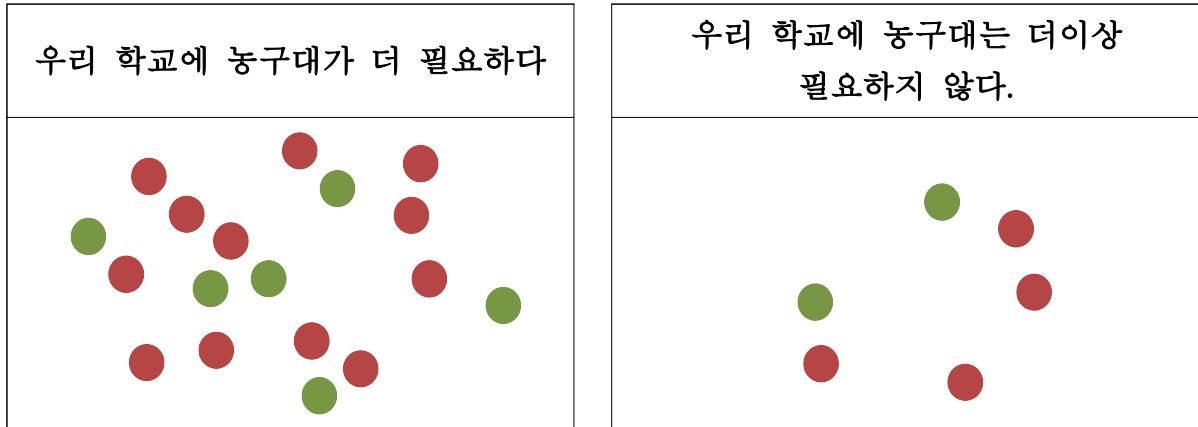
☐ 10월 ~ 11월 사이

☐ 12월 겨울방학 직전

☐ 옵션 추가 또는 '기타' 추가

구글 설문지

■ 스티커 설문조사



- 학생회 SNS 계정 개설 및 활용 -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 개설을 통한 학생들과의 상시적 의사소통과 학생회 사업 홍보 및 의견수렴

3) 사회참여활동 및 캠페인 활동

가) 학생회 중심의 사회봉사활동

학생회의 이름을 걸고 봉사가 필요한 사회시설 등을 찾아가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함께 하며 학생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도 느끼고 단합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만들기 캠페인 활동

- ① 선후배간 지나친 위계질서를 서로 존중하는 문화로 바꾸기
- ② “선배님” 대신 적절한 표현을 찾아 편하게 부르기
- ③ 후배가 먼저 하는 “안녕하세요” 대신 선배가 먼저 “안녕” 하고 인사하기
- ④ 존댓말 대신 친근한 언어 사용하기.

다)지역사회 참여 활동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학교 주변, 시·군·구청이나 의회 등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살펴 봐주세요’, ‘이곳에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등

아. 학생회 주관 행사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행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학교의 학사일정을 미리 알고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 행사 진행 과정

기획	행사준비위원회 구성 행사계획(예산)마련
↓	
홍보	-행사 홍보 및 안내 (행사 포스터 부착 학생회 sns 활용 등) -행사 관련 영상촬영 및 기록
↓	
진행	- 행사 진행과정 체크 및 준비물 확인 - 행사 진행 및 질서 유지
↓	
평가	- 행사 평가와 피드백 - 평가 결과 정리 및 공고

1) 축제

가) 축제 전

- ①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축제준비위원회 구성 - 축제 기획을 총괄하는 기구- 학생회, 동아리, 대의원(학급대표자회의), 자원학생 등으로 구성, 담당교사는 자문교사로 활동
- ② 축제 전 3~4개월부터 1~2주에 한 번씩 축제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 축제에 대한 학생설문조사, 학급회를 통한 요구사항 수렴
- ③ 축제기획안 작성 - 수렴된 학생의견을 바탕으로 기획안 작성, 축제의 주제, 개막식 구상, 일정 결정, 공연팀, 전시팀, 홍보팀 등으로 나누어 역할 분담
- ④ 축제 홍보와 참가자 선정 - 교내외 홍보 계획 수립 후 홍보물 제작(포스터, 팜플렛, 동영상 등)교내 게시판과 학급 게시판 적극 활용

- ⑤ 축제 마당별 신청과 준비 - 전시마당, 공연마당, 먹거리장터, 놀이마당 등에 참가할 동아리와 학급, 개인, 팀 신청 받기, 각 마당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시 주의사항 전달 -행정실과 자문교사), 참가 신청한 팀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
- ⑥ 축제 리허설 - 축제 하루 전에 장소 및 음향기기, 현수막 등 설치, 참가 팀 공연 리허설 실시, 음향기기와 조명 등은 전문 업체와 최소1~2개월 전 계약 -자문교사와 행정실 도움

나) 축제 당일

- ① 축제 개막, 폐막 이벤트
- ② 전시마당 - 동아리 활동 부스 운영, 각종 학습결과물과 작품 전시, 각종 체험 부스 운영
- ③ 공연마당 - 노래, 춤, 밴드, 악기연주, 연극, 개그, 마술, 선생님 공연, 영상물 상영, 방송제 등 무대에 올릴 수 있는 모든 공연, 지루할 수 있는 중간에 경품 추첨을 넣어 활력을 더할 수도 있음(경품추첨을 한 쪽 지로 넣어 진행학생을 따로 두면 좋음). 공연 진행자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1인, 2인(여-여, 여-남, 남-남))
- ④ 놀이마당 - 다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 진행- 민속놀이, 단체놀이 등
- ⑤ 먹거리장터 - 학부모, 동아리, 학급에서 장터를 열고 수익금은 기부, 꼭 필요한 숫자만큼만 열기-난립 주의, 쓰레기 처리 주의
- ⑥ 축제도우미 운영 - 기획과 진행에 자원하는 학생으로 운영, 질서 유지와 행사 마무리
- ⑦ 축제 마무리 - 행사 장소, 기기, 물품 등을 정리, 축제기획과 진행에 참여한 모두를 위한 뒤풀이 실시

다) 축제 후

- ① 평가 설문 조사 -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 아쉬웠던 점, 좋았던 점 등 만족도 조사, 결과 통계 처리 후 게시판에 게시
- ② 결산 - 집행한 예산 영수증을 제출하고 결산 보고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
- ③ 축제 자료 정리 - 사진, 동영상자료, 기획안, 홍보지, 설문지, 평가서 등 축제 관련 자료 전부 정리 및 보관

Tip 셋. 축제의 시작과 끝

1. 잘 놀기 위해 정보수집은 필수!!

축제를 준비하고자 할 때,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다른 학교 축제 프로그램이나 다른 지역의 청소년문화축제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참고하면 좋다. 각 마당의 구성이나 무대진행, 프로그램의 종류, 홍보 방법 등을 참고한다면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축제를 준비할 수 있다.

2. 축제의 주인은 학생!

축제의 모든 과정은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각종 행사 진행과 무대 진행을 학생이 하면 더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다.

전문행사대행업체의 사회자가 진행하는 대신 공개 오디션 등을 통해 선발된 학생 사회자가 학생과 공감할 수 있는 진행을 하면, 다소 서툴더라도 훨씬 더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축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비용 절감까지.

3.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평가와 기록.

축제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평가회를 통해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준비 과정과 진행 과정, 축제가 끝난 후 평가 기록 등을 꼭 남겨서 다음 축제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체육대회

가) 학생회 체육관련 부서 중심으로 체육대회준비위원회 구성

나) 체육대회 1~2개월 전부터 1~2주에 한번씩 체육대회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 체육대회 종목 구상, 대진표 추첨 방법, 시상품 아이디어, 역할 분담 등

다) 대진표 추첨 및 예선

라) 체육대회 당일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진행

마) 체육대회 마무리 후 간담회를 통한 평가와 반성 후 대의원회 보고 및 전체 학생에게 공지

※ 학교 사정에 따라 체육대회준비위원회 구성없이 학생회와 체육담당교사의 협의를 통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학생회 중심의 체육대회를 준비·진행할 수도 있어요.

Tip넷.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한 번 해볼까요?

3월초 신입생 입학 직후에 학생회 주관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신입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2,3학년 중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발한다.
- 학생회 임원과 선발된 2,3학년 학생 3~4명이 한 팀을 이루어 1학년 반에 들어가 학생회 활동과 학교의 전통 등을 소개하고 학교생활을 안내한다.
- 3학년 선배들은 학교의 전통이나 특징, 학생회 활동을 소개하고 2학년 선배들은 학교생활을 안내하는 등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다.
- 동아리별로 홍보계획과 홍보물을 만들어 신입생에게 동아리를 안내하는 시간을 갖고 신입동아리부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에서는 학생회의 오리엔테이션을 지원하기 위하여 3월 초 학급활동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자. 학생회 임원연수

학생회가 조직되고 나면 곧바로 임원 연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준비해주시는 수련활동이나 친목도모보다는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회의 일년을 계획하고 학생자치활동의 틀을 잡는 과정으로서 임원연수이어야 합니다.

1) 임원 연수 준비 과정

	기 간	내 용	세 부 내 용
1	3월 중순	참가인원 조직	참여 학생 확정, 계획안 수립
2	3월 25일	연수 장소 답사	세미나실, 강당 및 식당 답사 / 시설 및 장비, 프로그램 가능 여부 확인
3	3월 말	예산 확정	소요 비용 산출 후 예산 확정, 담당교사 및 행정실과 협의
4	3월 중	연수 프로그램 준비	준비 회의, 연수 자료 작성, 시설 점검, 예산 집행

● 프로그램 세부내용 예시

1. 인권 감수성 향상 연수: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연수
2. 민주시민교육 : 평화적인 교실 공동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3. 학생자치활동의 실제 연수: 학생자치활동의 틀 잡기
4. 토론하기
5. 학생회 연간 계획 수립
: 한 해 연간 계획 수립 및 상반기 학생회 활동에 관한 주요 내용 공유
(학생회 각 부서 사업 공유, 각종 행사에 관한 의견 수립)
6. 학급회의 연수
: 학급회의 진행 연수, 회장단 및 학급자치위원의 역할, 각종 회의록 작성 요령
7. 대의원회
: 학교생활규정 개정 공유, 학사일정에 입각한 학생회 활동 부서별 발표, 건의사항 논의

● 임원연수의 토론을 통해 얻은 결과 공유 사례-군산여자고등학교 (일부)

◎ 임원수련회 월드카페(자치가 살아있는 학교)제안 내용

▶ 동아리

- 학급 박람회 형식으로 각 반에서 동아리 홍보하기
- 동아리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공지(sns,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 강당에서 동아리 홍보 시간 마련 - 자율동아리 관리 필요

▶ 게시판

- 게시판 활성화 필요 (동아리 홍보 자료, 문제집 판매, 학교 행사 안내)
- 대학교 홍보(대학교 정보, 수시 정시 등급 등 각종 정보)

▶ 학급회의 시간

- 회의 주제를 학생회와 학교에서 정해서 공지 (선생님 의견: 학교에서 주제를 정하기 보다 반에서 자율적으로 주제를 정해 회의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 회의 시간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선생님들의 관리 필요
- 영상제작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메시지)
- 학급회의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네이버 폼, 오픈카톡, 건의함 등 활용

▶ **학생회 정기회의**

- 정기 회의를 활성화 (학생들의 건의사항이나 공약이행에 대한 건의)

▶ **진로 시간**

-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은 진로와 목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진로 설명
- 진로시간에 자신의 진로를 체험해볼 수 있는 발표 시간 필요
- 진로 활동주제를 각 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 **1인 1역**

- 진로와 연관 지어 학생들이 반에서 해야 하는 활동들의 범위 확장
(ex 경영 경제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총무 등)

▶ **봉사**

- 학급에서 봉사의 날을 정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2) 사업계획서 만들기

학생회가 사업(행사)을 하고자 할 때 사업(행사)계획서를 우선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일을 왜 하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왜 하는 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제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축제를 왜 하는지’, ‘축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지’ 등을 명확하게 한 후 축제계획서를 만든다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Tip다섯. 사업(행사)계획서의 내용

1. 사업 개요 : 활동 목적과 목표, 주제와 일정, 장소, 소요 예산액, 기대효과

2. 세부 사업계획서

주제, 일정, 장소, 활동 목적과 목표, 일정별 세부 활동계획, 홍보전략, 구체적 예산, 조직 및 역할 분담 내역, 평가계획, 추수활동 계획(행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들기

차. 소통

소통은 학생자치활동의 산소와도 같습니다. 학생회는 항상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선생님들과도 끊임 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학생과의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의견 수렴 - 온라인 학생회 운영(SNS, 홈페이지 활용) - 학생회 회의 및 행사 후 결과 및 평가 공지
교사와의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관련 주제가 있을 경우 교직원회의 참석: 3~5일전 교무부장 학생 관련 주제 알림 - 학생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 교직원회의에서 의견 제시 - 만약 교직원회의에서 논의될 학생 관련 주제가 전체 학생 의 건 수렴이 필요한 사안일 경우 교무부장을 통해 다음 교직원회의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 - 학생 건의사항 전달
학교(장)와의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및 의견제시 - 학사 일정 결정 관련 학생 의견 제시 - 수학여행지 및 현장체험학습지 선정 등 학생 의견 제시 - 졸업앨범 관련 학생 의견 제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과의 정기적 간담회 운영 - 일상적 학생 요구사항 전달 - 학생회장 공약사업 지원 요청

카. 학생자치활동 방해 요소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

1) 학생자치 방해 요소

- 낮은 인권감수성과 자치의식
- 시간과 공간, 예산의 미확보
- 입시위주의 교육 체제(성적 지상주의)
- 회의 진행 미숙 및 학생, 교사의 무관심
-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견 미수렴
- 학생자치업무 담당교사의 업무 과중
- 사회의 권위주의적 구조와 문화
- 대규모학교의 어려움

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영역	내용
학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회의 활성화 • 민주적인 선거문화(당선증, 토론회 공약집 등) • 학생회 임원 연수 개최(1년 계획 작성) • 학교생활규정 개정 참여(학생 의견 수렴) • 학교장 간담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참관) • 적극적인 학생참여(홍보 활동 강화) • 학생회 임원 간 지속적인 애정과 인수 인계 • 지역교육지원청 주최 학생자치활동 지원 연수 참여 • 지역별 학생회 연합회 참여를 통한 연대 및 공유 • 학생회 지도교사를 학생회가 위촉 • 학생 관련 행사 학생회 주관 운영
학교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참여 및 자기결정권 보장(의결사항 최대한 존중) • 학생자치활동 시간, 공간(학생회실), 예산(1%이상) 편성 • 학생회예산 지원(선거공약, 여론수렴 결과, 각종 회의와 모임) • 학생회 담당 교사를 학생회가 위촉 • 민주적이고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 • 학교생활규정 개정 및 학생회 활동 보장 • 관리자의 교육철학, 교직원(담당 교사의 추진력), 학부모의 지원 • 학생자치 관련 교직원 연수

생각 1	우리 학교 학생자치는?
생각 2	우리 학교의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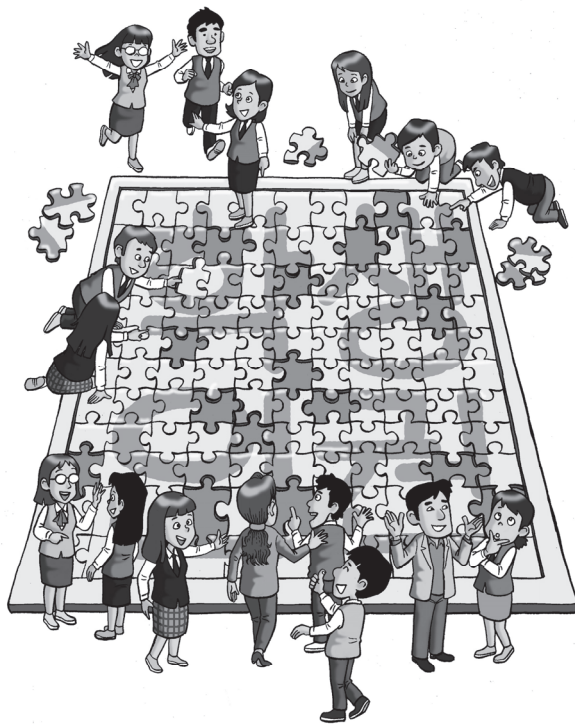
Ⅲ. 마치며

학생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학교를 방문해보면 학생들의 표정이 유독 밝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사 또한 많은 짐을 덜어 학생과 함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한다고들 합니다. 학창시절 민주적인 학교문화와 학생자치를 경험한 학생은 이 나라의 소중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와 동등한 인격체로 학생을 존중하고 학교 내에서 교장과 교사,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이 수평적 관계를 맺어 개인의 가치가 인정되는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자치활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부 록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3. 6. 25.)에서 의결된 전라북도학생인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13년 7월 12일

전라북도 조례 제3781호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 2 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 또는 유치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초·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유아교육법」20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과 그 밖의 사람으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생의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 스스로가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에 대한 권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비,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조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들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 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정비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유·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관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 인권옹호관 및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8조(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홍보) 교육감은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 및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직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자의 권리와 교육) ① 보호자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대하여 상담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하며,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3조(인권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전라북도 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인권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4조 (인권 모니터링)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차기 년도 인권실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실천계획에 대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학교별 평가와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학교별 학생인권 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

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호

제3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절 학원 및 대안학교 등에서의 인권보장

제39조(학원, 대안학교, 평생교육 등)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나 학생과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을 위한 시설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전라북도 내의 「학원의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과 대안학교, 평생학습센터 등 대안 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들 교육기관에서의 인권 보장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절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

제40조(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한 자
4. 전라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
4.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인권옹호관이 제안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①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위원회는 교육감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생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1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④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과 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지원청별로 학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①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둔다.

②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인권옹호관) ①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및 인권교육을 위하여 인권옹호관을 둔다. 그 구성 및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인권옹호관은 상임 1인으로 하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4조(검직금지) ① 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검할 수 없다.

② 인권옹호관은 전라북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검할 수 없다.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7. 학생 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46조(사무국) ① 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기획·정책의 수립, 인권침해의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을 위한 조직과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

제48조(지역교육지원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

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0조(조사) ① 인권옹호관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인권옹호관은 제49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와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3. 7. 12 조례 제37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인권옹호관에 대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인권옹호관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7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M E M 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 E M 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 E M 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 E M 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 E M 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 E M O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or typing.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 E M 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 E M O

[illegible]

M E M O

[illegible]

M E M O

[illegible]

존중과 참여로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만들기



 **학생인권교육센터**

우 54879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874

<http://human.jbe.go.kr>

